

## 서울대 로스쿨 절대평가 파장…변시 합격률 재조정되나

법무부가 2010년 11월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측 참석자들은 이날 변호사시험 합격률 기준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절대평가 도입·상대평가 완화’ 방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재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와 법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는 최근 상대평가 완화 방안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와 연계돼 있는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 등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로스쿨 측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협의회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75%의 전제조건으로 약속했던 학사관리 방안을 어길 경우 변호사시험을 현재의 당락판정시험의 성격이 아닌 엄격한 검증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2010년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입학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으로 하는데 합의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것을 내걸었다. 2014년 치러질 제3회 변호사시험까지 합격률 75%를 유지하되 이후의 합격자결정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로스쿨의 학사관리강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로스쿨교육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2015년에 있을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지금보다 후퇴한 조건으로 합격자결정방식이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엄격한 상대평가, 소규모 강좌 기피 등 부작용 초래”

서울대 로스쿨(원장 전상조)은 지난달 1일 학생들의 학업성적 평가에 있어서

수강생이 적은 과목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생이 많은 과목도 상대평가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대평가로 인해 학생들의 학점경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강좌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려대 로스쿨도 상대평가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엄격한 상대평가로 인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쌓기 위한 강좌를 선택하기보다는 좋은 학점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은 수업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선택 과목의 폐강 등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대 방침은 지난 2010년 12월 로스쿨협의회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책정을 둘러싸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변협은 응시자의 50% 내외 합격률을, 로스쿨협의회는 입학정원의 80% 이상 합격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2012년 시행되는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협의회가 제시한 학사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입학정원의 75%를 합격시켰다. 로스쿨협의회는 당시 △성적의 절대평가가 폐지 및 전 과목 상대평가 실시 △최대 20%까지 탈락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급제도의 시행 △상대평가 시 학점인플레이 방지를 위한 엄격한 배분 비율의 적용 등 학사관리 강화 방안을 약속했다.

#### ◇ 로스쿨협의회, 공감은 하지만 협의 거쳐 함께 가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는 서울대 로스쿨의 학사관리 완화 방안 발표 직후인 지난달 초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논의를 벌였다. 학사관리 완화 방안은 변호사시험 합격률과도 연동돼 있는 만큼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전체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다른 대학 로스쿨 원장들은 “가능하면 서울대로스쿨만 혼자 시행하지 말고 다함께 학사관리 완화 방안을 천천히 마련해 통일적으로 시행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다.

하지만 서울대 측은 이 자리에서 별다른 입장 변화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법률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절대평가 도입 시행 시기에 대해 “절대평가 도입 여부와 시행 시기 등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신현윤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엄격한 상대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선택과목이나 수강인원이 적은 과목의 경우 이를 완화하는 게 좋겠다는 협의회 차원의 안을 갖고 있다”라며 “다만 변시 합격률과 연동돼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고 다른 관련 기관이나 협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해 나가자는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내부 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학사관리 상대평가 완화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신 이사장은 “서울대 로스쿨이 학사관리 완화 방안을 도입하더라도 나머지 대학들이 기존 방안을 고수한다면 당초의 법무부와 협의가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한 로스쿨 원장은 “서울대가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로스쿨 재학생이 학점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로스쿨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 서울변회 등 법조계, “변시 운영방식 재편대야”

변호사업계는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최근 교과부에 공문을 보내 “재야법조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일부 로스쿨의 학사관리 완화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만일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엄정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면 현재의 변호사시험 운영방식은 변호사로서 적합한 자질과 소양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체제로 재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회는 “당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 증가 방안 대신 일거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이상으로 유지해 변호사시험을 당락판정시험의 성격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학사관리강화방안의 엄정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변호사시험에서 높은 합격률을 보장받기 위해 협의회가 스스로 결정해 발표한 학사관리강화방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엄격한 학사관리 일정을 전제로 해서 내년에 합격자를 75% 이상 뽑겠다고 이미 발표한 만큼 내년 변시 합격자 발표 때는 위원회가 이같은 전제조건이 정확히 지켜졌는지 등을 보고 (이후의 합격률 기준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며 “엄격한 학사관리 일정 준수 여부도 하나의 반영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당초 법무부와 로스쿨협의회가 합의한 ‘엄격한 학사관리’의 전제조건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서울대 측의 문제 아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법률신문 전문인용)